

데스크칼럼

박정렬

사회부 부국장 대우



40여년만에 광주와 전남이 다시 하나가 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6·3지방선거와 맞물려 후보자들의 공약을 통해 각종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실무준비단을 꾸려 조율을 나가고 있지만 320만 지역민에게 얼마나 다가서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먼저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 조직에 대한 통합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까.

양 시·도청 소속 공무원 규모는 5000여명(소방직 제외)에 이른다. 도시행정과 농어촌행정이라는 이질적 환경이지만 업무의 중복 등을 감안하면 통합 과정에서 정원 조율이 필수적이라 의견이 나오고 있어, 공무원들의 신분 보장을 어느 수준까지 이뤄지느냐가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차관급 부단체장 4명과 1급 보직 운영, 인사에 대한 자율성까지 보장했지만 내부 반발을 의식해 소극적 대처에 그친다면 행정조직의 덩치만 키울뿐 행정의 효율화는 뒷전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도약의 시발점

또 통합될 경우 주청사 문제는 갈등의 기폭제다.

광주시청과 남악의 전남도청, 순천에 위치한 동부지역본부 중 어느 곳을 주청사로 할 것이냐를 놓고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쉽게 풀기 어려운 난제다. 통합 초기 '세 지붕 한 가족'이라는 기이한 형태로 운영이 불가피해 보인다. 세 곳 모두 다양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통합특별시 추진이 지역균형발전과 도약이라는 취지를 감안하고 반드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RE100국가산업단지 조성, AI데이터센터 구축,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청신호가 켜진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도 이뤄져야 한다. 통합의 취지를 살려 소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대승적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지역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준비작업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낙후'와 '소외'로 점칠되는 우리 지역이 통합특별시 출범을 대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 역량이 결집되었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4년간 매년 '5조원+α'의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를 활용할 구체적 방안 마련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를 단순히 추가된 예산의 일부로 인식한다면 대도약의 골든타임은 그냥 허비되고 말 것이다. 통합특별시의 안착과 미래먹거리 산업 개발,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너지산업 관련 대기업 유치 등을 위한 정책 마련의 시드머니로 삼아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는 지난 2010년 마산·진해·창원이 합쳐진 '통합 창원시'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현재 표출되고 있는 갈등이 창원시에서도 그대로 나왔었다. 시 명칭과 시청사 위치를 놓고 3개 지역간 극렬한 갈등이 있었다. 통합을 통해 커진 예산 배분을 놓고도 특정지역에 집중된다는 문제제기로 소외된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 표출, 기대와 달리 인구 유출 심화 등이 이어졌다.

이 같은 문제들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전남광주특별시에서 벌어질 수 있으며, 도시간 통합이었던 창원시보다 도시와 농어촌이라는 이질적 지자체인데다 덩치가 더욱 큰 메가시티 구성을 하는 전남광주특별시는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역 경계를 지우고 거대 조직을 개편하는 작업, 그리고 통합을 통한 지역의 도약을 만들어낼 중장기적인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발과 기업 유치 등 통합이후를 대비한 철저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단순한 정치인들간의 합의가 아닌 지역 구성원 모두가 이해하고 합의가 가능한 화합적 통합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10년을 계획했던 통합창원시 안착이라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갈등과 반목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고 대도약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한데 결집하는 320만 지역민의 집단지성이 요구되고 있다.

기고

박민국

광주청년센터 교류협력팀장



활동가란 '어떤 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는 사람'이라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다.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아도 명확하게 어떤 대상이 그려지거나 모호하게 범주만 그려지는 활동가, 하지만 예를 들어보면 조금은 쉽게 이해되기도 하는데,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 군사독재정권 시기의 민주화 운동가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활동가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이해가 쉬워진다.

하지만 조국의 독립이나 민주화 같은 거창한 목적이나 목표를 뛰어넘는 것은 아니다. NGO 또는 NPO에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가, 동네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는 마을활동가도 있다. 그 활동이 생계에 도움이 되는지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생계와는 관련 없이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 크고 작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를 조사하는 사람, 연구를 하는 사람, 당사자로 목소리 내는 사람 등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임에 몇 번 나가보는 것으로도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활동을 얼마나 오래 했고 깊이 있게 했는지는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는 않았기에 시민 누구나 관심 있는 분야의 활동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활동의 결과로 우리 사회는 조금씩 나아가고 발전해 나간다.

특히 청년정책은 청년활동으로 시작해 청년의 주체성

청년 활동 생태계 복원... 청년이 살기 좋은 광주

이 강조되는 정책이다. 법률 제정이 논의되던 시기에 광주청년센터는 조례에 앞서 개관했고, 직후에 제정된 광주시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센터의 지위와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뿐만 아니라 청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과 제도도 청년 활동가의 목소리와 청년단체의 역할이 중요했다. 오늘의 청년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내일의 청년에게도 겪게 해서는 안된다는 소명으로 모였던 청년활동가와 청년단체들은 그렇게 청년정책을 대승시켰고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광주청년센터의 '청년모임' 사업도 만들어져 청년들이 모임 수 있는 장소와 재료비 등을 지원해 다양한 시도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지자체별로도 청년동아리를 지원하며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이뤄졌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관련된 지원사업이 중단됐고 청년활동 역시 힘을 많이 잃게 됐다. 고용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청년의 고용과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 위주로 변하게 됐다.

그렇다면 청년활동의 역할은 청년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끌어 올려 청년정책을 만들어 낸 것으로 끝났다고 봐야 할까? 전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청년활동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지원사업으로 청년의 삶의 질을 좋게 해 주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고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기는 어렵다. 반면 청년활동의 활성화는 지역이 청년에게 매력적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와 움직임이 사회를 채우는 모습은 건강하고 활동력이 넘치는 도시가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 기성세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만큼 앞으로의 사회를 살아

갈 청년들의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하는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 광주청년센터가 청년활동가를 발굴해 알리고 청년의 모임을 지원하고 응원하며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이다. 청년이 떠나지 않는 지역, 청년이 늘어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좋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좋은 청년의 활동이 활성화 되는 것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지역의 매력도를 올리고 청년이 유입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지역에서 청년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이 주춤한 틈에 나타난 부작용도 있다. 특정 단체나 종교 집단 등에서 청년모임을 가장해 청년을 포섭하고 세력 확장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 청년들의 모임에 경계심이 커졌다. 심지어 광주청년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것 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를 하기도 해 청년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청년모임이 줄어들수록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청년의 욕구는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 건강한 청년활동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청년활동의 목적이 반드시 사회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 나의 먹고 사는 문제(취업이나 창업)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려움을 함께 느끼는 사람들을 위하거나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거나, 단순히 취미와 건강을 챙기는 활동까지 무언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시도를 망설일 이유가 사라진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함께 사는 사회 구성원이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나와 우리를 위해 청년활동을 시작해 보자. 나를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취재수첩

통합특별시 출범...6·3 지선에 관심을

이산하

정치부 차장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향한 시계 바늘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번 선거는 어느 때처럼 치러오던 4년 주기의 행사와 성격이 다르다.

광주와 전남이 1986년 분리 이후 40년 만에 다시 하나로 묶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거대 담론

이 현실화되는 역사적 국면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과 궤를 달리한다.

시와 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때문에 통합 이후 지역을 이끌어갈 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미래가 단체장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체장이 추진하는 정책에 따라 지역민의 삶의 질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 방향, 미래 모습이 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비후보들의 공약은 더욱 세

심히게 살펴봐야 한다. 지역발전 위한 구상이라더라도 실현 가능성,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

특히 단순히 '중앙에서 예산을 따오겠다'는 구태의 연한 약속보다 통합 이후의 산업 배치, 인프라 확충, 인구 소멸 대응 등을 누가 더 정교하게 설계해 내놓느냐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 위에서 있다. 그 험난한 길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은 이번 만큼은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 후보의 화려한 이력보다 그들의 '통합 설계도'를 현미경처럼 살펴보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가 '통합'이라는 거창한 이름 뒤에 숨은 정치 쟁점의 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진정한 출발점이 될 것인지.

해답은 결국 후보들의 진정성 있는 공약과 시·도민의 냉철한 판단에 달려 있다.

사설

광주·전남 '에너지 절약'...파급 효과 '글썸'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에 나섰다. 중동전쟁으로 인해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2단계 '주의'에서 위기 현실화 직전인 3단계 '경계'로 격상되자 강도 높은 '전력 아끼기'에 들어간 것이다.

먼저 광주시는 분청사와 산하 공공기관의 경관 조명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청사 야간 경관조명 소등 시간을 기존 밤 10시부터 밤 9시로 1시간 줄이고 낮 시간대 청사 1층 공용 공간 조명 30%를 끄고 있다.

또 지하주차장·복도 조도를 절반 줄였고, 점심시간과 밤 9시 이후 필수 관제 시설을 뺀 모든 사무실 전등을 강제 차단하고 있다. 실내 난방 시설 가동 중지와 방일 저녁 7시 이후와 주말, 승강기 운행량을 30% 이상 감축하고 있다.

여기에 240kW급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가동해 청사 필요 전력을 자체 조달하고 열 손실을 막기 위해 낡은 열교환기를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등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도 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사무실 실내 조명 10%를 의무적으로 상시 차단하고, 햇빛이 드는 공용 공간 조명 50%를 강제 소등하고 있다.

도청 홍보용 대형 전광판과 청사 전면 야간 경관조명 점등 시간도 대폭 단축했고 여가 활동을 위해 개방했던 테니스장 등의 야간 운영도 중단했다. 화장실 등에 공급되는 온수 가동 시간도 줄였고 개인 전열기기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8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 출퇴근 차량에 대해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눈물겨운 캠페인이 아직 일부 공직자와 시·도민에게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승용차 2부제 시행후 공공청사 주변 이면도로는 이에 위반돼 청사내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한 공직자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한다. 또 이런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시·도민도 부지기수다.

이 캠페인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의 솔선수범, 그리고 시·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지역민들이 이를 실천하고 일상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대대적인 홍보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사후정산제' 폐지, 석유 유통 개선 계기되길

정유업계의 사후정산제는 사실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오랜' 관행이었다. 이는 이들이 석유제품을 거래할 때 받는 시점이 아닌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최종가격을 확정해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주유소는 기름을 공급받을 때 정유사가 임시로 정한 '잠정 매입 원가'를 선지불한 후 한달이 지난 뒤 국제 유가 등을 반영한 확정가격이 나오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인 것이다.

가격 변동이 극심한 에너지 시장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로 그동안 주유소 경영에 주는 충격을 완화는 '완충장치' 역할을 했고 예전 비싸게 산 기름을 싼 값에 판 경우 차액을 환급받아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보다는 단점이 더 많았다. 매입원가 불투명으로 주유소는 원가도 모른 채 판매가를 정해 합리적 가격 책정을 할 수 없었고 기름값이 폭등할 때는 훗날 '폭탄 추가정산금'이 두려워 원가가 오르기 전에 미리 소비자 판매가를 더 높게 올렸다.

또 가격 결정권이 있는 정유사는 손해를 보지 않는 반면 주유소만 역마진 위험을 떠안는 구조였다. 주유소가 받는 환급금을 현금 아닌 포인트로 지급받아 특정 정유사 소속으로 종속시키는 부작용까지 나타났다.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리고 주유소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관행이었다는 얘기가. 이 때문인지 불공정거래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정유사에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휘소소송까지 제기, 대법원 판결까지 갔지만 '불공정거래로 보기 힘들다'는 결론이 났다. 또 2015년에도 한국주유소협회 등이 주유소의 거래선 다변화를 방해한다고 공정위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번 관행 개선을 위한 '주유소-정유사 사회적대화 상생협약식'이 열렸다. 이 지리는 중동전쟁발 유가 급등속에 주유소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는 논란이 됐던 사후정산제의 폐지와 특정 정유사에서 전량 구매하던 연속거래제를 타 정유사 제품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혼합거래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이 조속히 이행돼 그간 묻혀 있던 다른 불합리한 거래 관행도 바로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40	경제부 370-7020	산업부 370-7010
				사회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신문부 370-7050	충무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